

방산업체 경영분석 요약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영 실태를 계수(計數)적으로 분석하여 업종별·규모별로 방산업체 운영상태에 대한 경영지표를 작성하여 방위산업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방산업체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97년 말 기준, 방산업체 경영 분석내용 중 결론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경영분석의 종합

'97년도 방위산업체 방산부문의 경영 상태를 종합하면 매출신장세가 다소 향상된 가운데 영업외비용 등의 증대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97년 방산부문 매출액증가율은 지난해의 7.18%에서 14.17%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방산부문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Delta 3.78$ 로 지난해 3.24%보다 더욱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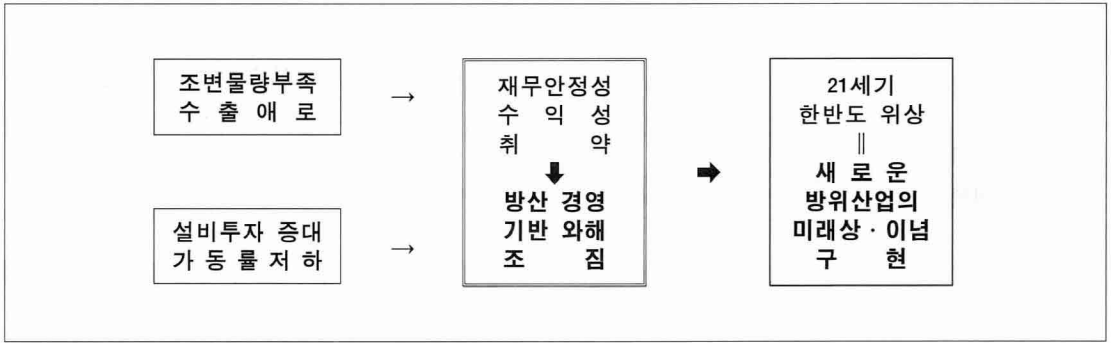
이는 항공유도업종, 함정업종 등의 일시적인 납품 확대로 영업이익이 증가(4.89%→7.61%)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증가와 큰 폭의 환차손 발생 등으로 영업외수지가 악화된 것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매출액증가율을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은 매출액 신장세가 두드러진 반면 중소기업은 매출액신장세

가 둔화되었고, 유형고정자산은 대기업과 중화학공업부문에서 높은 신장세가 지속되었고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설비투자가 '97년에도 이어져 제조업평균 유형자산 증가율은 13.6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97년 방산업체의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내부보유자금의 감소와 주식발행 부진 등으로 26.36%에서 20.27%로 저하되었고, 차입금 평균이자율의 하락(11.22%→10.59%)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의존도가 47.66%에서 크게 상승해 54.22%를 나타내어 금융비용 부담률이 높아졌으며 인건비, 임차료 등 기타 고정비 부담도 증가하였다.

가동률은 설비투자가 전년도보다 약 488억원(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를 고려할 경우 402억원)이 증가하고 환율 상승이 생산가공비율을 저하시킴에도 불구하고, 방산매출액의 증가로 55.7%('96년)에



서 56.9%('97년)로 약 1.2% 증가하였다.

방위산업의 경영유지 방안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방위산업체의 현안과제는 첫째, 국내 방산조변 물량 부족과 해외수출의 어려움에 따른 「방산물자의 수요부족」, 둘째, 「설비투자의 효율적 활용 및 가동률 저하」, 셋째, 「방산업체의 사업교환(swap)을 통한 구조조정의 방향과 향후 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 연구개발 투자의 유지 애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완성장비 최종조립 중심의 투자로 매년 늘어나는 설비 투자 증가액은 정부만을 수요자로 하는 조달물량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상실하고 경영의 심각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방산경영의 기반이 와해되면서 현재 방산업체간의 사업교환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구조조정의 혼란 속에 있다.

■ 방위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 검토

방산업체의 전문계열화는 방산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처 확보와 경제적인 조달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방산업체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중복적 투자를 방지하여 전문기술 축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방산업체의 기술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전문화」는 조립업체와 협력업체간의 통합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계열화」는 보호육성이 필요한 핵심품목 이외에는 기술경쟁이 가능하도록 신기술 개발 및 벤처기업 등에 문호를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방산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연장

'98년 말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용시한(조

전문화·계열화의 세부추진

추진 형태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방산업체 보호육성과 중복투자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화 및 계열화체제의 정비를 통해 무기체계의 기술특성에 따른 전문생산업체를 육성하여 핵심기술 축적 및 국산무기개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과 경제적인 조달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가능품목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에서 해제하여 경쟁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전문업체 미지정 품목 및 부적격업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화 품목이 광범위하거나, 세분화되어 업체지정이 곤란한 경우 등

방산 관련 조세감면 제도

대 상	감 면 내 용	감 면 실 적 (억 원)		근 거
		'96년	'97년	
부가가치세	방산물자 영세율 적용	3,013	3,118	조감법 99조
특별소비세	방산업체가 사용하는 국내생산 곤란한 수입원자재	-	0.4	조감법 103조

세감면규제법 제125조, 1998. 12. 31까지 종료되는 과세연도분)이 종료되는 방산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감면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부족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군 전력증강 현대화 계획 차질과 방산업체의 물량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방위산업의 방산수출 증대 방안 모색

방위산업의 수출은 국내 조변시장의 한계에 따른 물량확대로 설비투자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면한 방위산업체의 수출 증대방안은 먼저 현재 미국에 대한 수출협상력을 제고하거나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한 우회방안을 강구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의 완성장비에 대한 하도급공급 수출체계를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핵심부품과 주요구성품 공급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는 주한미군의 헬기 창정비의 국내 유치, 재래식 무기인 총포, 탄약, 기동

장비의 수출사전동의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출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등 주요 무기구매국과의 제3국 협력수출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우리나라를 지역 방산수출 거점국가로 인식하도록 하여 국제협력관계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군 보유 자산을 교환하거나 대여하고, 수출행정을 간소화하며, 방산수출업체의 지정에서 신고제 등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주요 완성장비의 조변 종료에 따른

신규 방산 조변 물량의 창출

'97년 방산매출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한 증가를 보인 실질적인 이유는 완성장비의 납품이 집중된 것에 기인하고 이런 현상은 '96년부터 '99년까지 주요 방산물자의 납기로 일어나는 일시적 매출 증가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98년부터는 주요 무기체계의 납품 종료에 따른 물량 중단으로 방산공장의 가동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업종, 총포업종, 함정업

방산물자 수출 증대 방안

기 본 방 향	중 점 관 리 방 안
법령 및 제도의 정비	- 방산수출업체 지정제에서 신고제도 전환 - 수출지원을 위한 군 보유시설 및 자산의 대여 및 교환 - 수출행정 간소화
대미수출 협상의 제고	- 하도급 공급 수출체제 발전 - 주요무기구매국과의 제3국 협력 수출 사업 중점 지원
정부 수출지원 강화	- 해외무관의 수출지원 활동 강화 - 해외전시회 및 국내전시회 참관

방산물자 납품종료 및 예정품목과 업체요구대책

주요 방산물자	업 체 명	업체요구(안)
M16, K2탄	풍 산	신형탄 개발 완료 구매요망
잠 수 함	대우중공업	중형 잠수함 사업조기 착수
전 차	현 대 정 공	UP-GUN전차 양산
UH-60 헬기	대 한 항 공	UH-60 추가생산
F-16 전투기	삼 성 항 공	F-16 추가생산

종 및 기동업종에 걸쳐 매출 감소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의 적자편성으로 인해 방위력개선사업비용은 어느 예산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산물량의 확보는 한층 더 어려운 입장에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으로 방산공장 가동의 중단과 가동률의 급격한 감소는 평시 방산공장의 운영 한계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중심의 수급체계에서 정부 물량의 한계로 증장기적으로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 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방산분야가 비수익적이라는 이유로 '사업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경시하기보다, 핵심 방산공장의 운영 유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공백의 방지와 사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부는 최소 물량이라도 보장하여 방위산업의 기반 외해를 방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위기시대에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유지

현재 국방과학기술 정책은 과거 정부 주도 연구개발에서 업체주도 연구개발로 확대되고, 주요 핵심 기술과 부품을 도입하여 생산하는 연구개발을 지양하여 완성장비의 독자개발과 핵심기술 부품개발의 산·학·연 연계체제 구축 및 선진각국의 연구개발

기술정보 획득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냉전체계가 무너진 이후 국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군수산업의 위축을 가져왔고, 이러한 가운데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실물경제의 위기와 외환위기시대에 접어들어 대부분의 기업체가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거나 지속시켜 나가기를 기피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특히 국방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정부재정의 적자편성으로 정부부문의 한계, 경기위축으로 인한 민간부문의 내부유보자금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 투자감소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자주국방 내지 연구개발 최소화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현재 방산업체는 연구개발시 단순 시제업체로 참여하고, 개발된 무기체계에 대한 양산을 담당하므로 체계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자체 연구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과중하여 중점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에 대한 집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 무기체계분야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 체계에서 자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업체중심의 개발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능개량분야에서는 업체의 소요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防